통일 독일의 사회통합의 장애요인
: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문 태 운 (Moon, Tae-woon)*
(E-mail : twmoon@kookmin.ac.kr)

논문접수일 : 2013년 7월 1일
논문심사일 : 2013년 8월 2일
게재확정일 : 2013년 8월 20일

---

* 학위취득대학 : 프라이부르크대학
현직: 국민대학교 교수

www.kci.go.kr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의 장애요인 :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국문요약>

급속한 정치적 재통일 후 20년, 실질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많은 독일인들은 정책결정 과정에 좀 더 많은 합의가 있어야 유용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충분한 토의 없이 통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후회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독일인들이 어디에서 시행착오를 가져왔는지 구조 전환과정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합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헌법적 이념과 염원이 아직 충족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지를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동·서독 간의 균등한 삶의 조건을 실현하는데 있다. 시민의 권리를 실제로 확보하는 것은 모든 정치과정이나 포괄적인 사회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후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이끄는 여정이 다소 길었던 것은 사회제도의 제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실현시키려는 시도가 많은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동독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서독 주민들은 삶의 조건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독일의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의 주요한장애 요인이 되었다. 독일의 정치문화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법치주의적 국가' 이념이었음을 감안할 때, 법치국가를 확립하게 되면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믿음은 그 자체가 독일적인 오류일지도 모른다.

[주제어] 독일통일, 사회통합, 사회주의 통일당, 독일의 정치문화, 프레카리아트

www.kci.go.kr

I. 머리말

지난 20여 년간 통일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전환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구 서독지역에 비해 경제적 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머리와 가슴으로 통일된 독일에 진정한 사회통합[1]은 난제로 남아있다.

독일통일의 근본적 사회문제는 동서독인의 경제적 격차이며 여기에서 동독인이 자기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현실에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독인은 스스로 결정하여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지만, 새롭게 획득한 자유를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업과 기업 사이의, 나아가 민족 사이에도 경쟁과 갈등의 길이 나란히 놓여있다. 자유는 현존하는 차이를 악용하여 새로운 차이를 낳았고, 자유는 사회적 강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동독인의 자의식 속에 가지고 있던 동독-정체성(Ost-Identität)과 그들 고유의 역량은 무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구동독지역 재건(Aufbau Ost)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전적으로 서쪽에 의존하였고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어긋난 계산은 경제적으로 전체 독일에 부담을 주고 있다(Klaus 2005, 9-10).

독일인은 지난 20여년을 회고하면서 조급한 통일을 반성하고 있다. 독일 통일은 역사적으로 유일한 예[2]이고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 20년간의 통일과정에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이유는 있지만 통일 이

1)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합의 개념은 파슨즈(Parsons)의 정의에 따라 동서독인이 통일독일에서 사회화되고 있는 사회체계에 대한 적응과 목표달성을 지칭한다.

2) 양독 통일이 재통일(Wiedervereinigung)인가 신통일(Neuvereinigung)인가에 대한 성격규정에 관해서는 법학자와 법제사가(法制史家) 간에 어려운 논쟁이 있지만 대등한 입장에 선 동·서독의 국가통합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www.kci.go.kr

전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보다 합의 지향적 결정과정이나 신중한 고려가 주어졌더라면 하는 것이 바로 그 반성이다. 사회체계는 경제체계라는 목적, 도구적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문화체계와 의사소통적 행동을 통하여 그 존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때 어디에서 그들이 시행착오를 가져왔는지 또한 구조 전환과정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합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헌법적 이념과 염원이 아직 충족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지를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경제시스템에서 갈등은 직접적으로 통일 후 동독의 경제상황에서 나타나고 간접적으로 파산과 실업이라는 사회적 귀결속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다시 문화체계에서 사람간의 인격적 교차에 관련을 맺는 메타커뮤니케이션(Metakommunikation)으로 이어진다.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논점과 관련해 첫째, 통일의 정치적 프로세스, 둘째, 통일 후의 동독일의 경제상황 그리고 셋째 배외주의(排外主義)의 대두로 나누어 독일통일의 사회적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정치적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고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남긴 부정적인 영향들이 향후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도 유사한 쟁점으로 부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II. 통일의 정치적 프로세스

1. 원탁회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서독이나 동독에서 다양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1990년 3월의 동독 총선거 즈음에 정점에 달했다. 그 중에서 구동독의 원탁회의에서 주로 통일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었다. 원탁회의는 동독시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담아 통일을 위

www.kci.go.kr

한 다양한 제안을 내 놓았고 시민연대가 형성되어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들이 실험되어지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적었지만 분쟁조정의 모델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원탁회의가 동독의 자유화에 미친 역할은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원탁회의의 법적 지위는 불분명하다. 내각도 아니고 의회도 아닌 그들이 동독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민주정치가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고 다만 그 제도적 기능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독일의 조기 통일 방식을 몰가치적으로 보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논외로 한다면 그 방식은 동독국민 다수의 민의가 반영된 결과였다. 여기에는 원탁회의라는 독특한 시민운동이 있었고 복수의 정당에 의하여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치러진 자유선거였으며 그 결과는 민의의 집약이었다.

1990년 3월의 선거[3]로 구성된 동독인민회의는 찬성 294, 반대 62, 기권 7로 서독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 선거 결과는 통일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이성보다는 성급하게 감정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되어질 수 있다. 조기통일에 반대하는 것이 보다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정당이나 후보자는 유권자의 이러한 정서에 호소하려고 하는 제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원외조직인 원탁회의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였으며 정치적 지도자를 선발하는 기준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정치과정의 중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도전이자 부정적인 발상이었다.

---

3) 1990년 3월의 선거 결과, 동독에서는 보수적인 기민련(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이 정부 여당이 되었고 서독에서는 CDU와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이 다시 연정을 꾸렸다. 서독은 통일협약을 통해 동독을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함으로써 동독의 법도 서독 정부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게 된 것이다(Lüderssen 1992,148). 이 협약으로 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권리와 권한을 가진 두 지역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서 독일에서는 두 개의 법질서가 양립하게 되었으며 완전한 사법통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20년 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

www.kci.go.kr

2. 사회주의 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사회주의 통일당(SED)은 명백하게 동독의 국가계급 정당이었다. 사회주의 통일당(SED)는 1946년 창당된 이후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와 시각을 조정하지 못하고 1당 지배체제로 운영되었다. '위대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분 앞에서 SED는 점차 중앙집권적 획일주의로 빠지게 되었다. SED는 정당의 과제가 되는 민주적 절차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정치과정의 담당자가 되지 못하고 엄격한 규율과 수직적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었다. SED는 전위당으로서 당원 중 소수[4]가 당과 국가를 장악하고 있었다.

모든 결정은 제도화된 의사형성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치국에 의해서 내려졌고 SED의 중앙위원회는 정부 위에 군림하였으며 정부기구들은 단지 이 명령을 수행하는 처리기구로 전락하였다. 정치적 합목적성이 형식적 합목적성보다 중요함에 따라 정치의 영역에서 도덕적 기초를 상실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NSDAP)이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해체된 것과는 달리 SED는 통일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그 역할이 종식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그 기능은 소멸되었으나 법적으로 완전히 해체되지 못했다. SED는 통일 이후 당명을 민주사회주의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PDS)으로 변경하고 동독시민의 대변인이며 진정한 후견인으로 부상했다. 최근 다시 서독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hlalternative Arbeit und Soziale Gerechtigkeit, WASG)과 합병하여 '좌파정당'(Die Linke)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

4) 이 집단들은 토마스 암머에 의하면 그 구성원은 약 30~40만 명 정도 추정되며 갈수록 특정 소수로 축소되며 이들에게 더 많은 권력이 집중되었다(한독사회학회 엮음 2011, 29-30).

www.kci.go.kr

민주사회주의당(PDS)는 독일사회민주주의(Deutsche Sozialdemokratie)의 전통을 계승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선거대안(WASG)은 사민당에 실망한 수공업 노동자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좌파정당'은 과거 동독의 SED의 당원이거나 동독의 기득권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동독의 수도 베를린 동부와 그 주변지역에서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독일기본법(제21조)에 의거하여 정당의 설립도 자유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해 존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당의 내적 질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며 위헌여부에 관하여는 연방헌법 재판소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법제도는 국가정당(Staatspartei)의 정치 노선에 충실한 도구로 여겨졌다. 통일조약에서 국가정당인 SED는 독재정권, 불법정권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동독은 "부정의 국가"(Unrechtstaat)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는 옳지 않으나 정치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개념이다[5].

법률적으로 민주사회주의당(PDS)는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계승자이며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존속을 금지했어야 했다.

3. 새로운 헌법

독일 통일은 기본법에서 가장 신속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룩되었다. 즉 통일은 기본법 23조의 제2문에 따른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가입에 의하여 완수되었다. 이 규정의 동독에 대한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연방공화국이 영토상 불완전한 것

5) 여기에 대한 규정은 어려운 논쟁이지만 동독을 전체적으로 "비법치국가"(Nichtrechtstaat)라고 평가할 수 있다.

www.kci.go.kr

으로 이해되었다. 동독을 독일의 다른 일부로 보았고 자유로운 의사 형성 가운데서 동독의 가입과 기본법의 발효가 이루어 졌다. 23조에 따라 동독의 가입이 독일 국민의 국제법상 정통성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영토 확장이라는 문제로 간주되었다(Thomas 2003, 1174.)

다시 말해서 빠른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선언을 통해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와는 달리 기본법 제146조의 방법은 기본법이 독일 국민에 의하여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된 헌법이 효력을 발하는 날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본법의 성립 당시에 독일 통일에 의한 신헌법의 출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양국은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헌법을 갖는 새로운 국가로 탄생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과 절차를 요하는 이 길은 국내외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부되었다. 만약 146조에 따라 새로운 독일을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면, 시간의 경과로 하여 서독 기본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또한 실행되고 있는 민주적 제도를 개혁할 수 있었고 동독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명실공이 통일과업에 필요하고도 가치 있는 헌법을 제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휴머니즘과 사회정의라는 “동독 정체성”(Ost - Identität)과 이념은 보존되어질 수 있었고 이는 독일 사회 통합에 순기능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그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민주주의적이고 범인류적(allgemeinmenschlich)인 이상과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상의 힘이 휴머니즘과 사회적 정의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더라도 효율과 노동생산성의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실현될 수 없다(Scholz 2000). 따라서 생산의 사회화와 사회적 소유의 당위성도 실제로 높은 효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유형태를 실제로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적 질서를 가미하는 것이 결코 휴머니즘이 더부살이를 장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의가 어떠

www.kci.go.kr

한 차별도 없는 전체적 평균화와 혼동되어서도 안 된다. 사회주의적 질서의 진정한 힘은 인민권력이 국가와 사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새로운 헌법은 동·서독인의 공동체 질서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을 연방국가적 질서에 부합하도록 하는 완전한 헌법을 제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이 146조에 의거하였더라면, 전체 독일인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통일헌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Karlo 1949)

4. 화폐통합

1990년 초 서독 정부는 동·서독 경제통합을 목표로 “독일을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와 “만인을 위한 복지”를 내걸었다.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장경제의 기틀을 구축하는 것이며 동독 마르크에 대한 교환비율을 정하는 것이었다. 화폐통합은 경제적으로 큰 위험을 내포하여 경제전문가들은 빠른 통합을 경고하였지만 정치적으로 통일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정책이었다. 서독 경제는 동독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 영업의 자유를 허용하는 개혁을 위하여 차별적인 규정들을 철폐하고자 했다. 화폐통합과 경제공동체 구성은 국가통일의 초석이 될 뿐 아니라, 국가재정의 안정화, 안정적인 사회보장과 같은 총체적인 경제정책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서독 마르크를 동독에서 병행하는 것이었다. 동독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문제였다. 화폐교환비율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5가지로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6)]

6) 즉 외화기금과 관련해 1:1, 1:5 두 가지, 민간관광과 관련해 1:3, 1:4.4 두 가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율교환비율의 형태로 논의되었다. 서독은 교환비율을 1:5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단계적으로 동독화폐를 평가절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www.kci.go.kr

1990년 3월 27일 연방 노동복지부 노베르트 블륌(Nobert Blüm) 장관은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총리에게 서한을 통해 1:1 교환비율을 제안했다. 동독인은 시장경제의 사회적 의미가 정착된 후에야 통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서독정부는 여기에 신뢰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며 2:1 교환비율로는 수백만 명이 사회보조금제도의 장벽을 넘지 못해 서독으로 이주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와 반대로 3월 30일 칼-오토 푈(Karl Otto Pöhl) 연방은행 총재는 동독 2마르크를 서독 1마르크로 교환할 것을 중앙은행 자문위에서 결정한다. 화폐를 1:1로 교환할 경우 대부분의 동독 기업들은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며 그로 인해 동독 경제는 기회비용과 부채에 시달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 당시 외환시장에서 동·서독 교환비율은 1:4.5였다. 시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1:4나 1:5로 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시장여건에 맞는 환율은 1:4.3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등가의 교환비율을 원하는 여론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었다. 그러나 약 1900억 마르크에 달하는 개인연금을 1:1 비율로 교환하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통화과잉과 1:1 비율로 기업부채를 평가할 경우 채무 원리금 상환 시 수많은 기업의 재정적 파산이 예측되었다.

이러한 위원회의 입장이 알려지자 동독 국민의 분노와 반대시위를 불러 일으켰다. 동베를린 그리고 다수의 동독 도시에서 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1:1,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외쳤다(Eckert 2005, 13). 위원회의 제안은 인민회의 선거전에 참여한 동독 정당들의 공약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1:1 교환비율은 촉구되었다.

동독의 경제, 통화, 사회통합을 위한 서독의 제안에서 콜 총리는 사유재산, 임금 및 보수에 대한 동·서독 교환비율을 1:1, 모든 기타 자산에 대한 교환비율을 1:2로 결정하였다. 현재 소득 및 연금지급은 1:1 교환비율로 하되 은행예치금 및 채무(기업채무 포함)는 통장 2:1

www.kci.go.kr

비율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화폐통합은 경제적으로 구 동독기업에 대한 파산선고와 같았다. 동·서독 화폐의 1:1 등가교환은 동독의 외화가득 지표가 23~27%에 불과한 사실로 미루어 실질임금의 4배 이상의 상승을 의미했다. 동독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화폐통합은 코매콘(COMECON) 무역의 붕괴를 가져왔다. 동·서독 화폐가 실제 교환비율을 유지했더라면 동독 경제는 유럽 내에서 '중국'과 같은 경제적 위상을 점하며 시장에서 경제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의 교환비율을 가급적 실제 가격에 근접하게 설정하여 동독의 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서독에 부합하도록 했다면 동독지역의 경제혼란을 보다 축소시킬 수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경제적 수준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진 두 개의 경제가 통합될 때 경제적 합리성으로 균형과 조정의 길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조정 그 자체가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5. 사유화

"통일조약" 제 25조에 의해 구동독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사유화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을 설립되었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에 따라 경영이 존속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만이 구서독기업 혹은 외국기업에 매수되었다. 구동독의 많은 기업은 매수 기업의 지사나 영업소가 되어, 본사의 결정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기능밖에 없었다. 때문에 본사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관리나 연구개발은 구동독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구동독에도 많은 자립경영기업은 존재하나, 이들 다수는 민영화 후에는 소규모 개인기업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구 동독기업의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www.kci.go.kr

것. 독일제조업기업사업소의 고용자규모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이에 따르면, 구동독 제조업 취업자는 거의 3분의 2가 고용자 250인 미만의 사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이에 대해 구서독에서는 같은 사업소규모에서 일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3분의 1을 조금 넘는 정도였고, 사업소 규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며, 기업 간 충분한 협업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제조업사업의 취업자규모별 구성 (2007년) (%)

사업별 취업자수(명)	구 서독	구 동독
1 ~49	9.9	17.0
50~99	11.7	18.5
100~249	19.8	27.2
250~499	16.1	15.5
500~999	13.5	9.7
1000이상	29.1	12.2
계	100.0	100.0

(주) 구 동독에 베를린을 포함.

(출처) Brenke. K. & K. F. Zimmermann 2009, Tabelle 3.

구동독 경제는 1990년 7월의 통화, 경제, 사회동맹 체결과 함께 붕괴하였으나 90년대 전반에는 8~9% 성장하여, 93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된 서독을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는 성장률이 저하하여 서독보다 낮아졌다. 2008-09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때 경기는 구동독보다 구서독 쪽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영향도 심각하였다.

www.kci.go.kr

III. 통일 후 동독의 경제상황

1. 빈부격차와 그 원인으로서 실업

독일에서는 주기적으로 사회적 하층[7]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독일 사민당 산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은 『개혁과정에 있는 사회』라는 제하로 독일인의 사회개혁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8] 여론조사기관 TNS 인플라 테스트 연구소가 2006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약 3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보고에는 응답자들의 정치적 가치관과 견해에 따라 9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 있어 새로운 점은 바로 「하층」이라는 표현대신 종속적인 '프레카리아트'(Prekariat)라는 새로운 용어의 사용이다. 이 '프레카리아트'(Prekariat)라는 용어는 사회학자 베르너 휘빙거(Werner Hübinger 1996)가 자신의 저서에서 「불안정한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빈곤연구에 있어 확립된 개념이다.[9] 이들은 사회적 배제와 전락(轉落)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계급으로, 특히 구동독 지역의 취업 가능 연령의 남성 또는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는 2006년 당시의 대연정 정권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선거 때 투표하지 않거나 좌익정당이나 극우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

7) 하층(Unterschicht)이란 독일 사회에서 신분상승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는 계층을 말한다.

8) 사회조사의 개요는 Friedrich-Ebert-Stiftung, "Gesellschaft im Reformprozess": Die Friedrich-Ebert-Stiftung untersucht Refombereitschaft der Deutschen을 참조.<http://www.fes.de/aktuell/documents/061017-Gesellschaft-im-Reformprozess-komplett.pdf>

9) 사전적 의미에서 보자면 불확실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빈궁한(prekär)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합성어로서 전통적 노동 프롤레타리아트와는 달리 지적 능역은 갖추었으나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모순을 안고 빈곤에 위협받고 있는 계층을 의미한다.

www.kci.go.kr

유형은 전 유권자의 8%(구 서독지역에서 4%, 구 동독지역에서 20%)를 점하고 있다.

<표 2> 독일의 유권자(유형별)

업적지향의 개인주의자	11%
체제적 업적 보지자	15%
비판적 교양 엘리트	9%
사회 참가하는 시민	10%
만족한 상승 지향자	13%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 중간층	16%
자기만족의 전통주의자	11%
권위지향의 저(低)자격자	7%
밖으로 내몰린 프레카리아트	8%

(출처) Friedrich-Ebert-Stiftung, "Gesellschaft im Reformprozess": Die Friedrich-Ebert-Stiftung untersucht Refombereitschaft der Deutschen에 기초하여 작성.

2006년 12월 5일에는 연방통계청이 2004년의 통계에 기초하여 조사보고서 『유럽에 있어서의 생활 2005년』[10]을 발표하였다. 이 조사보고서에는 EU가맹국 간에 합의되어 있는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채

10) 이의 내용은 아래 참조. Birgit Lenuweit, "Leben in Europa 2005 : Erste Ergebnisse der neuen Statistik über Einkommen und Lebensbedingungen für Deutschland", *Wirtschaft und Statistik*, 1/2007, SS. 31-27/ Statistisches Bundesamt, *Armut und L-ebensbedingungen-Ergebnisse aus LEBEN IN EUROPA für Deutschland 2005*, 2006 <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DE/Presse/pk/2006/EU-Slic/Pressebroschuere_EU_Silc,property=file.pdf>/*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6. Dezember 2006 ; *Süddeutsche Zeitung*, 6. Dez-ember 2006 ; ibid., 7. Dezember 2006 ; *Frankfurter Rundschau*, 6. Dezember 2006.

www.kci.go.kr

용하여 월 소득이 소득의 중앙치 60%, 즉 856유로 미만의 사람을 「빈곤에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독일에는 인구의 13%(구서독 지역에는 12%, 구동독 지역에는 17%)에 해당하는 1060만 명이 빈곤에 위협받고 있다.[11] 또한 1990년 통일 이후 현재에도 계속해서 구 서독지역과 구 동독지역 간에 경제적 격차와 멘탈리티에 있어 여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풍요로운 선진국 중의 하나이다. 2012년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 GDP)이 41,168 달러 달러에 달하고 있다[12].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사회복지 제도의 덕분으로 기본적으로 절대적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에서 말하는 빈곤은 상대적 빈곤으로 풍요로운 국가에서의 공정한 배분의 문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빈곤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격차」의 문제가 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2001년 5월에 『독일의 생활 상황 - 제1차 빈곤·부유 보고』[13]를 제출하였다. 연방의회는 2001년 10월에 빈곤·부유 보고를 정례화 하는 것을 결의하여 연방정부에 각 의회 회기 중간에 보고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2005년 3월 연방정부는 『독일의 생활 상황 - 제2차 빈곤·부유 보고』[14]를 제출하였다. 제1차 및 제2차의 보고에 따른 빈곤율(소득 중앙치의 6% 미만의 사람의 비율)의 추이를 보면 서 독일에는 1973년

---

11)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서독사람들의 1/7이 빈곤의 위험을 느끼는 반면 동독사람들은 1/5이 빈곤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in. http://www.dw.de/armutsrisiko-in-ostdeutschland-h%C3%B6her-als-im-westen/a-17053993

12) 「빈곤」이라고 하면 하루 생활비가 미화 1불 미만으로 의료시설이 없고 깨끗한 물이 없으며 공부를 할 기회가 없는 사람을 정의하는 말로, 세계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12억 명 있다. OECD, OECD in Figures 2007. <http://oberon.sourceoecd.org/vl=1182048/cl=22/nw=1/rpsv/figures_2007/en/page4.htm>

13)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연방의회의 자료 참조. “Lebenslagen in Deutschland : Erster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4/5990, 08.05.2001.

14)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연방의회의 자료 참조“Lebenslagen in Deutschland : Zweiter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5/5015, 03.03.2005, S.133.

www.kci.go.kr

의 8.7%에서 1988년 11.8%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통일 후의 독일에서도 1993년 11.7%부터 2003년 13.5%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15]

구 동독지역의 빈곤율은 1993년에는 22,0%로 구 서독지역(9.1%)의 2.4배나 되었지만 1998년에 17.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 다시금 19.3%로 상승하였다(표3 참고).

<표 3> 각종 빈곤율의 비교와 추이

빈곤율의 조건	전국		구 서독지역		구 동독지역	
	1998년	2003년	1998년	2003년	1998년	2003년
소득중앙치의 40% 미만	1.9%	1.9%	1.9%	1.9%	1.9%	(2.0%)
소득중앙치의 60% 미만	12.1%	13.5%	11.0%	12.2%	17.1%	19.3%
공적소득이전 전 (추계)	38.5%	41.3%	34.9%	38.2%	54.1%	55.1%

(출처) Tabelle Ⅰ.2, “Lebenslagen in Deutschland : Zweiter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5/5015, S. 45에 기초하여 작성.

말할 것도 없이 빈곤으로 빠지는 최대의 원인은 실업에 있다. 통일 전인 1975년 서 독일에는 실업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었다. 이후 비록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83년 이후 줄곧 2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었다. 1990년 통일 후 독일은 통일에 따르는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감소되었지만 1992년 이래로 동독지역의 경제 붕괴로 인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의 실업

15) 연방통계청에 의해 대략 5년 주기로 행해지고 있는 「소득·소비 추출 조사」에 의거한다.

www.kci.go.kr

자가 존재하였다. 더욱이 1997년에는 실업자의 수가 400만 명을 돌파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경제의 글로벌화가 현저하게 진전되었고, EU의 중구(中歐)와 동구(東歐)에로의 확대로 인하여 독일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인원감축과 엄격한 노동조건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실업자들이 종속적인 프레카리아트(Prekariat)로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구 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실업자의 형상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종속적인(Prekariat)와 일치한다.

2. 동독 인구의 감소와 GDP 성장

국민경제계산[16]에 의하면 91년의 구동독(베를린포함) 인구는 1800만 명, 구서독은 약 6200만이다. 구동독의 인구는 일괄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까지 약 170만 명으로 10%가까이 감소했다. 구서독의 인구는 계속 증가했는데, 2010년에는 350만 명 정도 증가해 약 6500만이 되었다. 최근의 구동서독간의 1인당 GDP 격차가 약간이긴 하나 축소된 것은, 구동독의 생산이 증가해 구서독에 접근했다기보다 구동독의 인구가 감소한 결과로, 1인당 GDP가 구서독보다도 상대적으로 커져 격차 축소를 이끌었던 것뿐이다.

인구변동에는 사망과 출산의 자연적 요인과 인구의 이동에 따른 사회적 요인이 있으나, 이 기간 구동독의 인구변화에 큰 요인이 된 것은 인구이동이다. 구동독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베를린 장벽 붕괴 후인 1989년부터 1991년 동안으로 구동독을 떠난 사람 수가 100만 명이 넘었으며, 이 대부분은 구서독으로 이동했다. 그 후, 구동독 인구는 일시적으로는 증가했으나 90년대 말부터 다시 감소하였다.

16)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부(富)를 나타내는 통계 방식. 기존의 국민 총생산에 산업 연관표, 국민 대차 대조표, 자금 순환표, 국제 수지표를 종합 편성한 것이다. 국민 경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경제 정보량이 많아 산업별 투자나 소득 자산과의 관계 등 경제 현상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www.kci.go.kr

이에 구 동독주민의 주요 이동처가 된 구서독 지역에서는 같은 동기간 인구가 약 6000만 명에서 약 65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생산과 인구의 변화를 종합해 생각하면 1인당 GDP에 있어 구동·서 독일의 격차축소가 90년대 후반부터 정체되었고 이의 요인은, 구동독의 인구감소와 구서독의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의 생산이 구서독을 밑돈 것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2000년대 중반부터 구동·서 독일의 생산은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최근의 약간의 격차축소는 생산요소보다 구동독의 인구감소에 의해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노동생산성의 격차와 고용

동·서독 지역의 격차축소의 정체에 대해 생산의 증가를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해 검토해 보자. 취업자 1인당 GDP로 나타낸 구동독의 노동생산성은 91년에는 구서독의 45%였으나, 2009년에는 82%까지 근접하였고, 2010년에는 80%에 머물러 있다(표4 참조). 취업자 1인당 GDP의 격차가 인구 1인당 GDP의 격차보다 작은 것은, 구동독의 취업률(인구수에 대한 취업자수의 비율)이 구서독에 비해 10%정도 낮기 때문이다. 구동독의 취업률은 91년의 47%가 피크였고, 그 후 2006년까지는 거의 43%, 2010년에는 구서독의 51%에 대해 46%까지 소폭 상승해왔다. 그러나 생산성을 시간당으로 생각하면 구 동·서독의 격차는 취업자 1인당 생산성보다 크다. 구동독의 취업자 1시간노동당 GDP는 91년에는 구서독의 44%였으나, 2010년에는 77%로 축소하였다(표4 참조). 그러나 취업자 1인당 GDP에 비해 취업자 1시간노동당 GDP의 격차가 큰 것은, 구동독의 취업자가, 구서독보다 약 5% 많이 일하기 때문이다. 2010년의 취업자의 연간총노동시간은 구서독의 1407시간에 대해 구동독은 1468시간으로, 구 동독의 노동자는 구서독보다 연간 60시간이나 많이 일하고 있다.

www.kci.go.kr

<표 4> 구 동독의 GDP(명목)의 추이

	인구 1인당 GDP	취업자 1인당 GDP	취업자 1시간당 GDP
1991	42.9	44.5	44.3
1995	67.1	72.2	65.9
2000	67.2	75.7	70.1
2005	69.7	78.9	74.6
2006	70.3	78.9	75.1
2007	70.7	78.8	75.9
2008	71.3	79.5	76.6
2009	73.5	81.6	78.1
2010	72.5	81.1	76.8

(주) 구 서독을 100으로 한 수치, 구 동독에는 베를린을 포함.
(출처) Arbeitkreis VGR der Länder 따라 산출.

이상과 같이, 구 동·서독의 노동생산성에 있어서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구조적인 요인을 보자. 구서독과 비교한 구동독의 취업자당 총생산을 부문별로 나타낸 게 <표5>이다. 구서독에 비해 경영규모가 비교적 큰 농업부문에서는 구동독 취업자당 생산은 구서독을 상회하나, 그 외의 부문에서는 모두 구서독을 밑돌았다. 특히 건설업과 서비스부문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2008년의 구동독 건설업의 취업자당 생산은 구서독의 77%, 상업·수리업이 75%, 부동산·기업지향서비스가 74%, 나아가 그 외의 공적·사적 서비스가 68%로 부문평균인 80%를 밑돌았다.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기업지향서비스의 생산성이 낮은 것과,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이 생산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 등이 구동독의 낮은 노동생산성의 한 요인이다. 90년대 초부터 생산을 급속히 확대해온 제조업은 구동독 산업전체의 평균을 상회하긴 하나, 구서독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약 8할에 그치고 있다.

www.kci.go.kr

<표 5> 구 동독의 부문별 취업자당 생산(구 서독=100)

	1991	1992
농림업	44.6	108.3
산림업	56.4	90.8
제조업	28.4	82.1
에너지·수도	46.6	88.3
건설업	56.0	77.0
상업·수리업	56.0	75.1
음식·	54.0	88.8
·통신	40.5	81.6
금융·보험	64.7	85.0
부동산·기업지향서비스	39.8	73.5
행정·방위·사회보장	61.8	93.0
교육	49.3	92.8
	67.8	89.6
기타 공적·사적 서비스	67.9	67.8
가계	80.0	97.2
	44.9	79.5

(주) 구 동독에는 베를린 포함.

(출처) Arbeitskreis VGR der Länder에 의해 산출.

구서독 제조업에 비해 구동독 제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에 관해서는, 구 동·서독에서는 노동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 지적된다. 구동독의 노동으로는 단순한 수작업, 혹은 고기능 수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에 대해 구서독에서는 고기능이고 수작업이 아닌 노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구서독에서는 기업 관리나 연구개발, 또 마케팅 등의 고기능 노동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로는 구동독에는 기업의 본사, 특히 대기업의 본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연구

www.kci.go.kr

센터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인당 GDP로 측정한 구동서독일의 경제격차는, 2010년 시점에서 구동독은 구서독의 73%까지 축소되었으나 급격한 축소는 90년대 전반까지로, 이후 점점 축소 폭이 감소되었다. 이 원인은 인구변동보다는 구동독의 생산정체에 있는데, 이 생산의 성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노동생산성이지만 이 노동생산성에 있어서도 90년대 후반 이후 격차축소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역으로 구동독의 생산증가를 이끌던 제조업의 비중이 작다는 구조적인 요인 외에도, 구동독의 제조업이 단순 수공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의 비중이 큰 것과, 구서독에 비해 기업규모도 작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 역시 생산성격이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의 협약자금은 구서독의 수준에 급격히 접근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에는 이 협약자금수준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즉, 노동생산성에 적합하지 않은 높은 자금은 기업을 도산으로 몰아넣든지, 자금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 결과, 구동독의 자금코스트는 구서독보다 낮아졌고, 이 때문에 최근 구동독의 조세소득은 구서독의 68% 정도에 멈춰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 하에서, 구동독에서는 사회적 급부가 소득에 추가되는 것으로 사회적은 수요가 충족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독의 모든 주로부터의 재정적 이전이 불가피한데 그 액수는 연간 700-800억 유로에 달하며, 구동독 역내 수요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구동독이 구서독 제(모든) 주로부터의 이전적 급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높은 실업률이다. 구동독의 실업률은 2006년까지 17%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항상 구서독의 거의 2배였다. 이는 통일시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있어 구동독 경제의 급속한 붕괴와 그 후의 제조업의 과정에서 볼 수 있

www.kci.go.kr

는 급격한 자본집약도 악화에 따른 고용흡수력의 대폭적 저하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구동독의 자본수준은 고용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으며 인적자원의 유출을 막기에는 너무 낮다.

그러나 구동서독일의 경제격차의 축소가 줄어들지 않은 것에 대한 독일연방정부의 평가는 양면적이다. 동서 격차가 고정화하여 구동독 경제의 구서독으로부터의 재정이전에의 의존이 계속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독일의 '메쪼죠르노'(Mezzogiorno)로서 지적되었다. 이 주장은 이탈리아의 남북 경제격차 문제를 독일의 동서 격차 문제에 끼워 맞추려는 것이지만, 양자는 태생적 배경에 차이가 있어 이탈리아의 논의를 바로 독일에 끼워 맞출 수는 없지만, 격차의 배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최근의 논의에서는, 독일의 동·서 간 격차축소는 이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견해가 되고 있는 듯 생각되지만, 이 동·서 간 경제격차문제를 통일과 함께하는 독일의 특수한 문제로 보기보다, 오히려 영역적 격차문제로 보려는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지역적인 격차는 구서독 안에서도 존재하며, 충분히 실증된 것도 아니지만 인구밀도와 1인당 생산량의 관계에 주목해, 구동독의 1인당 생산이 구서독에 비해 작은 것은 인구밀도가 작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다(Erich 2005, 20-21). 나아가, 이 격차는 동·서 각각의 지역 내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구동독은 민간 연구개발은 확실히 약하나, 튀링겐, 작센, 작센-안할트 남부에서는 혁신적인 기업이 입지, 또 드레스덴에는 반도체산업이 유치되었고, 예나에서는 광학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와 몇몇 연구기관은, 2020년까지 이들 구동독 지역은, 구조적으로 약체화된 구서독의 제 주, 자르란트, 슐레스비히-홀스타인, 라인란트-팔츠, 니더작센 등을 따라잡는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www.kci.go.kr

Ⅳ. 배외주의의 대두와 동독의 정체성 문제

통일이 진전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익 급진주의가 일정한 세력을 확보하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동독에서 우익과격주의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현재화(顯在化) 되어 있다. 그 원인으로는 과거 파시즘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가 폭력을 분쟁처리와 해결을 위한 확실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동독시민은 어쩌면 아이덴티티의 상실감에 고뇌하고 있고, 그것도 네오 나치 세력의 정신적 온상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동독과 함께 부정한 정권이 몰락한 것 때문에 사회주의의 규범적 가치뿐만 아니라 "통일의 규범적 결손"(Nomative Defizite der Einheit)까지도 감수하고 있다.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Habermas 1994;41).

갈등의 불편한 세계를 독일인이 항시 싫어한다는 정치문화로 갈등을 피할 수 있는데도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물리적인 힘이나 권위로 진압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파시즘이나 배외주의를 선호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의회라는 '떠들썩한 점포'를 원칙적으로 배격하고 '민족적' 의도의 필요도 파시즘이 대두한 것을 목격하였다. 그 때 '진정한 국가'에 대한 낭만적 향수에 젖은 나머지 국민들은 그 기본적 전제조건의 모순된 성격이 개의치 않고 국민공동체를 대표하는 권위주의에 경도된 것이다. 독일인의 정치적 태도의 기본 속성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신의 섭리'와 결합된 '위대한 지도자'는 다시 한 번 국가지상주의적 이념에 정당성을 부여할지 모른다.

동독의 아이덴티티[17]로서 반전, 평화, 반(反)파시즘, 반(反)제국주

www.kci.go.kr

의, 사회복지 등의 공식적 논의가 그 의미를 상실한 지금, 동독 시민 간에는 사회주의적 조국에의 충성과는 별도로 비(非)이데올로기적인 애향심이라고 하는 또다른 일체감이 존재하고 있다. 애향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아이덴티티는 다소의 독자성을 지닌 개념이라면 애향심만으로는 다소 애매한 것일지도 모른다.

동독인은 스스로 '2등 시민'[18]이라고 명명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동독은 "불법국가",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는 "불법정권"으로 또는 "독재정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분명 국가와 정권에 대한 비하임에도 불구하고 동독인은 이를 마치 자신을 향한 부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일독일에서 동독인은 법적인 기회균등을 현실적으로 얻지 못하고 동·서독 주민 간의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과 평등한 시민권의 원리와는 모순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문화의 특징이 '법치주의적 국가' 이념이었음을 감안할 때, 법치국가를 확립하게 되면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믿음은 그 자체가 독일적인 오류일지도 모른다.[19]

Ⅴ. 결론

통일 후 동독인이 구조변화를 위기로서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 사회적으로 자기 동일성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동서

---

17) 동독의 아이덴티티라는 단어의 개념을 「구동독에 유형적(有形的), 구체적, 제도적으로 존재했던 것 가운데 통일된 독일에서 동독인뿐만 아니라 서독인의 마음에 남아있어야만 하는 가치의 총체」를 말한다.

18) 이 용어는 1917년 라테나우(Walter Rathenau)가 힌덴부르크 부인에게 쓴 편지에서 유래되었는데, 유태인으로서 독일 사회에서 시민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차별대우를 묘사한다.

19) 이 원칙에 관한 특징적인 이론을 소개하면 "국가는 …… 국민에게 어떤 일정한 범위의 자유를 주며 오직 법률적으로 규정된 전제조건 하에서만 이 영역에 간섭한다". 위의 책, 233쪽에서 재인용.

www.kci.go.kr

독 사회 통합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위기의 통일 독일적 의미는 경제체제에서 관찰되는 객관적 과정만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동독인의 내면적 세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독일 통일은 20년이 지난 오늘날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난날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에 비해 크게 개선된 부문도 있으나 아직도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정체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동·서독 경제통합에 있어서 동독의 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서독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더라면 동독의 재건에 더 도움이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구동독의 기업업의 사유화에 있어서 동독인에게 많은 수혜가 주어졌더라면 동독인의 자기 확신으로 인하여 자율적으로 동독 경제 재건에 보탬이 되었으리라 추론된다.

독일 통일이 재통일이 아니라 신통일의 절차를 갖추어 여기에 알맞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더라면 전체 독일인의 정체성을 통일시키면서 국민통합에 더 많이 이바지 할 수 있었으리라 믿어진다.

통일 독일의 첫 번째 과제는 통일 헌법의 전문에서 보장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동·서독 간의 균등한 삶의 조건을 실현하는데 있다. 시민의 권리를 실제로 확보하는 것은 모든 정치과정이나 포괄적인 사회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이 경제영역에서 재화와 용역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듯이, 사회라는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둘러싸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만 한다. 이는 선택된 소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어야 하며 그 참여의 결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후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이끄는 여정이 다소 길었던 것은 사회제도의 제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실현시키려는 시도가 많은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한 갈등

www.kci.go.kr

은 있게 마련이다. 하나의 사회조직을 결속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산출되는 잠재적 갈등의 강도도 비례한다.

갈등은 해결되거나 지양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되어 져야 하며 갈등조정의 제도적 배려와 해법은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독일인이 그렇게도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자연이 그들에게 왜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지는 독일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Dohnany, Klaus von, 2005, “Freiheit Ost”, *APuZ,* 40, pp. 9-11.

Eckert, Rainer, 2005, “Das historische Jahr 1990”, *APuZ, 40,* pp. 12-18.

Giegerich, Thomas, 2003, *Europäische Verfassung und deutsche Verfassung im transnationalen Konstitutionalisierungspro-zess*, Berlin: Springer-Verlag.

Habermas, Jürgen, 1994, *The Past as Future, interview with Michael Haller*, Max ed.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Hübinger, Werner, 1996, *Prekärer Wohlstana. Neue Befunde zu Armut und sozialer ungleichneit*, Freiburg im Breisgau: Lambertus-Verlag.

Röper, Erich 2005, “Die minderen Brüder und Schwestern”, *APuZ,* 40, pp. 19-24.

Schmid, Karl, 1949, “Die politische und staatsrechtliche 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Matz, Werner (Hrsg.),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satzungsstatut*, Stuttgart-Köln

Scholz, Dieter 2000, *12 Thesen zur Gerechtigkeit an der Schwe-lle zum 21. Jahrhundert*, in. http://www.memo.uni-bremen.de/docs/m0021.pdf, 2013/06/10.

www.kci.go.kr

The Obstacles to Social Integration in the Reunified Germany: Reflections on the Political Issues

Moon, Tae-woo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Even 20 years later after the rapid reunification, few Germans would agree that the state of unity has been actually been achieved. Many Germans regret that German unification took place without enough consultation of political issues, benefitting from a more consensus based decision-making proces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what Germans have learned by trial and error as this article details why they had not referred to the merits of consensus democracy that probably might let structural transitions be made from unification to integration at a lower price and what constitutional values and wishes have lacked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from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perspectives.

The most important goal of the German reunification was to create the equal living conditions for all citizen with equal rights in the east and west. Equal civil rights means that all citizens have equal access to all political processes and comprehensive social ones.

However, the journey to achieve genuine social integration has taken longer than expected because the attempts to achieve the independent and equal participation in many parts of social

www.kci.go.kr

institutions faced a lot of resistance.

In reality, equal opportunities have not been legally guaranteed for East Germans, and thus there exist differences i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That has become the major barrier to social integration since the reunification of the East and West Germany. Considering the fact that one of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German political culture was the ideology of 'legal state'('Rechtsstaat' in German), the belief of 'legal state' itself - the belief that state founded on the rule of law automatically guarantees civil rights - must be a fallacy with German characteristics.

Keywords: German 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SED, German political culture, Prekariat

www.kci.go.kr